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 사후관리 어디로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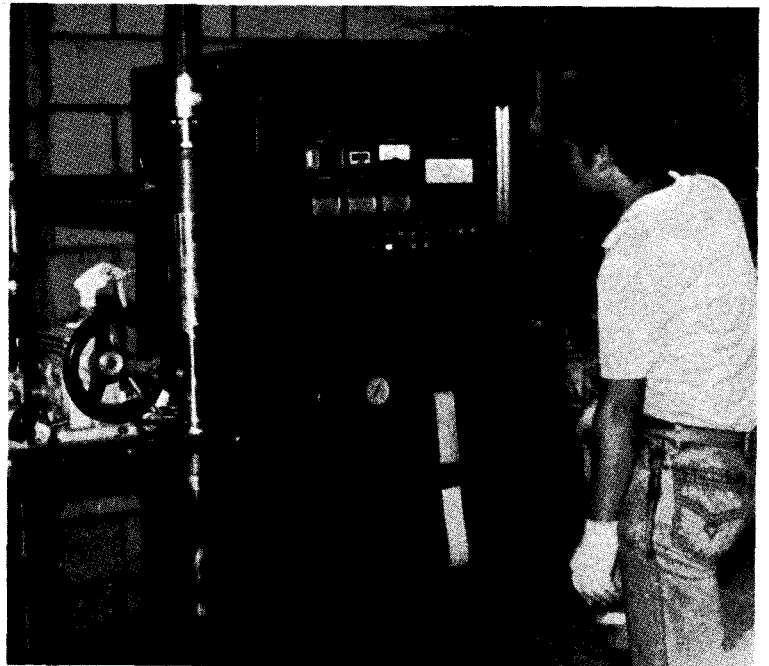
신 형 호

(사) 한국온돌시공협회 부산경남지부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연례 행사로 실시하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청의 이해 부족과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업계로부터 빈축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부산시 K구청이 5월 들어서 실시한 사후관리의 후문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행정 관리로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 절약 정책과는 달리 사후관리가 현실에 미치지 못함을 노출 시킴으로서 무자격, 무허가 변태 시공업체의 부실 시공 등으로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관리청은 무허가 무자격 시공업체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관청으로부터 시공업 지정을 받아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코져 노력하고 있는 성실 시공 업체에만 사후관리 운운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특정 단



체와 결탁이라도 한 것처럼 업무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동행하면서 특정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면 불법 변태 행위가 있어도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지나가고 특정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는 시공업 기준이 미달되는데 어떻게 시공업 지정을 받

았느냐는 등, 그리고 5종 지정업체에 가서는 어떻게 유류보일러를 판매코져 전시하였느냐는 등 고발하면 허가취소는 물론 벌금까지 물어야 한 다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자인서를 강요하고 다닌다 하니 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없다.

동경근교 주거도시 건설

이것이 근간에 말썽이 되었던 사이버 기자들의 공갈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사후관리청이 시공업 지정을 허가해 줄 때 적법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모순을 스스로 자랑이나 하듯 하니 어떻게 행정이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을 것이며 국민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기를 바랄 것인가?

동력자원부의 주정책인 에너지 절약시책 그리고 부실시공 예방으로 소비자보호란 큰 명목이 그동안 사후관리청의 인식 부족과 담당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사회발전의 모순과 에너지 절약 및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국가가 진정코 에너지 절약 시책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사후관리청 담당 공무원들의 양식있는 마음가짐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선량한 시공업자들은 법질서기강이 비현실적으로 흐를 바에야 차라리 시공업 허가를 취소하고 무허가 업자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직업 전환을 하든가 하는 것이 마음편안 하겠다고 하니 시공인의 목소리가 아쉽게만 느껴진다.

관계부처는 시공업과 관련된 현실성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사후관리청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업계의 보호육성과 아울러 건전한 시공풍토를 조성하여 국가 정책인 에너지 절약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동경근교에도 주택1백만채 규모의 대단위 주거도시가 신규 건설된다.

일본건설성은 세계 최고의 땅값에다 택지마저 부족해 심각한 주택난에 빠져있는 동경 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겨냥, 「도심에서 1시간이내의 통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일원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짓기로 했다.

건설성이 최근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濱), 가와시키(川崎) 가와구치(川口) 등 동경주변의 위성도시 일원이 새 주거단지의 유력 후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10년에 걸쳐 1백만채 규모의 주택을 새로 건설한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이다.

건설성은 이를 위해 이듬해 보지역내의 관청 공공기관과 민간공장 등 이미 건물이 들어서있는 1천9백여만평과 택지개발이 가능한 1천4백만평의 입야 등 모두 3천3백만평의 대지를 물색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건설성이 이같은 대규모주택건설계획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근본적으로 택지부족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한 투기꾼들의 주택투기와 이에따른 집값폭등현상이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대규모 물량작전을 통해 폭발직전의 주택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한편 주택가격도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의 이같은 계획이 자칫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짙다고 진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택지개발이 도리어 부동산가격을 큰 폭으로 밀어올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다케시타내각이 출범이래 「일본열도향토론」을 정책목표로 제창,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수도권인구집중을 억제하겠다는 당초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려 1백만채의 주택을 수도권에 신규 건설함으로써 도리어 지방인구의 대규모 수도권유입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겨냥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나선 일본정부의 대단위주거지역건설계획은 출발 전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